

민주, 오늘 '금투세' 결론... 지도부 선택은?

이총서 지도부에 일임할 듯... 이재명 대표 포함 "유예 컨센서스" "유예하면 시행 어려워...상법 개정 등 시장 선진화 필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

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 논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론에 힘을 실는 발언을 했다.

지도부 내 다른 의원 역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당내에서는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면서 "이번에 미룰 경우 당분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어색한 만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정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韓 "김대남 '허위공격 사주' 목인 못해"

대통령실 "갈등 조장 안돼"...녹취록 강경 대응 입장에 선국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 대한 공격을 특정 매체에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개전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당원이었던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언론에다가 제보하거나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며 "좌파 유튜브, 아주극단에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며 "당이 알고서도 목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

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윤리위 조사 및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전 선임행정관과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한 대표가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이 의혹에 대해 선국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발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방의원 후원 저조

지방의원이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중(인천 서구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광역의원은 23명 중 2명(8.7%)이, 전남 광역의원은 61명 가운데 12명(19.7%)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은 69명 중 단 한 명도 후원회를 개설하지 않았다. 전남은 22개 시·도의회 기초의원 247명 중 19명(6.1%)이 후원회를 만들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은 저조한 상황이다. 광역의원은 12.3%(872명 중 107명), 기초의원은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회계 책임자 선임부터 사무소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후원금 모금·회계 처리 등 어려움으로 후원회 개설 실적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전라권 R&D 사업비 3%...전국 최하위"

광주지역 국토교통연구개발 R&D 지원액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경상권에 집중된 사업비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사업비는 2020년 5212억원, 2021년 5948억원, 2022년 6385억원, 2023년 6149억원, 올해 8월 기준 4592억원 등 총 2조 8286억원이다.

이 중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는 1조 5052억원(53%)이 집중 지원됐으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은 6210억원(22%),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3250억원(11%) 등을 지원 받았지만, 전라권(광주·전북·전남) 875억원(3%), 강원 337억원



(1.2%), 제주 75억원(0.2%) 등은 극히 미미한 금액을 지원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광주는 2020년 37억원, 2021·2022년 47억원, 2023년 33억원, 올해 8월 기준 15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제주와 울산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R&D 연구개발 사업 인프라 의존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라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R&D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진숙 "中 '부적합' 김치 90% 이상 그대로 유통"

최근 5년간 국내 수입·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 중 7%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금(金) 배추'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품목 수는 56개다. 이 김치는 중국 제조소 36곳에서 만들어져 38곳 수입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 36곳 중 16곳(44.4%)은 식약처로부터 현지실시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HACCP 인증을 받은 후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됐고, 2023년·2022년 각각 HACCP 인증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지난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 단계에서 반송·폐기됐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시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부적합 김치가 적발돼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에 이른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의 현장 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있었다"면서 "식약처는 국내의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